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구성과 전근대·근현대사의 비중 문제

신유아*

(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

The Composition of Korean History and the Amount of Modern History in Textbooks of Korean History

YouA Shin*

(Incheon University)

ABSTRACT

Near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now has the education of its own history in school curriculum.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nationality of each country, each has a common perception that history education is important. This is because everyone agrees that the nation's national identity is the core of its identity, and that it forms the backbone of national unity. In Korea, history textbooks were temporarily organized in selective courses and until recently were chosen as subjects of choice in the CSAT. However, despite the repeated neglect of national history education, the national sentiment should not always be neglected, and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consensus will eventually prove to be a necessity for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s CSAT. Despite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Korean history, education has always been mentioned in conjunction with the word "crisis" and "stalemate". This article looks at the key issues in the history of the curriculum and the contents of history textbooks.

Key words : history curriculum, Korean history textbook, Korean history, selectable courses of education, A social subject

I. 서언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국사를 학교 교육과정 속에 편성하고, 이를 가르치고 있다. 과목의 편제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자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국사가 국어와 함께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고, 통합의 중추가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사과목은 일시적으로 교육과정상 선택과목에 편제되었던 적도 있었고, 최근까지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 사실상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사교육에 대한 홀대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는 언제나 국사를 소홀히 다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결국 한국사 수능 필수화 조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사 교육의 필요성이 이처럼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사 교육은 언제나 ‘위기’, ‘난항’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었다. 이는 물론 수능에서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국사를 학생들이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현실이 근본적인 배경이었지만, 국사 교과서의 방대한 분량과 그 내용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구성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교과서 내용분량의 문제

국사 교과서의 분량이 과다하여 공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다. 또, 국사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계와 현장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한국사가 수능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국사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고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다고 하겠다.

국사교과서의 분량을 대폭 축소해야만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전문가와 교사들이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다소 소극적이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성취기준의 수를 축소하거나, 교육과정 해설 등의 문서에서 ‘세세하게 왕조명을 열거하는 것을 지양할 것’ 등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분량 축소를 위해 부득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내용 요소와 분량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출판사 간의 경쟁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집필자와 출판사에게 분량 결정을 맡겨둔다면 이들은 경쟁력 있는 교과서의 출간을 위해 충분한 분량의 교과서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수험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교과서는 앞으로도 최대한 빠진 내용 없이 완벽을 추구할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분량은 중학교 ‘역사’가 한국사와 세계사를 합쳐 약 500쪽 이상,¹⁾ 고등학교 ‘한국사’는 약 300~400쪽에 달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주당 3시간으로 가르치는데, 이 정도의 분량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1시간에 약 3~4쪽의 분량을 가르쳐야 한다.²⁾ 이러한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근대사와 현

1) 한국사가 대략 총 320p, 세계사가 총 230p 정도이다.

대사 부분을 선택적으로 가르치거나 소략하게 다루고 지나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어제오늘이 아니었음을 잘 알면서도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사가 알아서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수능에서 필수과목이 된 지금 이는 그대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동안은 한국사 선택자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수업하는 교사 간에 합의하여 어떤 부분은 소략하게 학습하고 지나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출제 범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취사선택이 불가능하다. 구구한 논거를 들어 분량 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모든 논거를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시간 내에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을 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정상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사’ 교과서 내용 구성 및 근현대사 비중 문제

다음으로 국사교과서의 내용구성 문제를 살펴보자.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다고 할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비판은 사회과 속에서 국사과목의 비중, 즉 시수 축소를 주장하는 입장에 의해 더욱 거세졌고, 결국 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이 과연 필요하냐는 주장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역사학계는 이에 대한 대응에 부신했고, 그 대책으로 제시된 원칙이 ‘계열화의 원칙’³⁾이었다. 즉,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역사교육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급 간에 계열성의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매번 제기되어, 3차 교육과정 이래 초등은 생활사나 인물사 중심,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 고등학교는 문화사 또는 사회경제사를 강조하는 방식이 꾸준히 표방되었다. 이밖에도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 고등학교는 정치,경제,사회, 문화를 분야별로 나누어 서술하는 분야사 체제를 취하였고,⁴⁾ 2009교육과정⁵⁾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 중심의 통사 체제를

2) 이현복, 「역사교육 계열화에 대한 재검토와 근·현대사 비중의 적절성 모색」, 『역사교사 세미나 자료집』, 교육부, 2014.2.17., p.77.

주당 한국사 수업은 3시간, 이것을 1년(34주) 계산하면 102시간이다. 이중에서 4번의 시험기간을 제외하면 대략 94시간 정도 수업한다.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총 445쪽이다. 이 중에서 부록, 대단원 명이 있는 쪽 등을 제외하면 본문이나 학습 자료로 구성된 쪽수는 420쪽 남짓이다. 이것을 94시간으로 나누면 4쪽~5쪽 정도다. 즉 1시간 수업 안에 학습해야 할 쪽수가 4쪽~5쪽인 것이다.

3) 양호환, 「중등 역사 교육과정 개발의 현안과 역사교육 개선 방안」, 『역사교육』 120, 2011.12, pp.294~295. 양호환은 계열성 또는 계열화라는 용어는 타일러가 말한 ‘계열성(sequence)’과는 다르게, 학교급별 내용 차별화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타일러가 말한 ‘계열성’은 학습내용의 계속성 속에서 심화확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학습 방식의 위계를 달리 한다는 의미로는 ‘계서성(階序性)’이라는 번역어를 쓰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4) 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4번이나 반복할 뿐만아니라, 총체적으로 일어난 역사현상을 인위적으로 여러 분야에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실제 현장 수업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취하되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하되 세계사와의 융합을 시도하면서 사회경제사 및 대외관계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2013년 중학교 1학년, 2014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09 교육과정 ‘역사’ 및 ‘한국사’ 교과서의 단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중·고등학교 ‘역사’와 ‘한국사’의 단원구성

	과목	단원 구성			
		국사:세계사	전근대:근현대	중점분야	국사와 세계사 단원 구성
중학교	역사①	6:3	9:6	정치사, 문화사	한국사 단원, 세계사 단원을 대단원별로 구분하여 1권의 책에 병합시킴
	역사②	3:3			
고등학교	한국사	9:1	3:3	사회경제사, 대외관계사	근현대 부분에서 세계사 단원 10~20% 포함 (중단원 5개중 1개 정도)

반복학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그 동안 이처럼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어느 것 하나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시대별, 혹은 분야별로 중점 또는 비중을 달리하여 나온 교과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반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과 시험문제 출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중학교보다 소략하게 서술된 전근대사를 수능에 대비하여 어느 수준까지 보충해서 가르쳐야 할지가 첫 번째 과제였고, 중간중간에 끼어들어간 세계사를 과연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할지가 두 번째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있는 쪽에서도 동일한 고민거리로 대두했다. 과연 중학교보다 못한 수준의 전근대사를 어떻게 수능에 출제할 것인가? 그리고 출제진을 계속해서 근현대사 전공자로 대부분 채운다면 3년 연속으로 출제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이나 자녀 및 가까운 친척이 수능을 치를 경우 출제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문제의 패턴이 고정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사’ 과목이 별도로 있는 가운데 한국사 속의 세계사 단원은 이와 중복을 피해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이처럼 여러 가지 난점이 초래된 것은 반복학습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계열화에 집착한 나머지 더욱 근본적인 가치, 즉 학생들의 역사 이해라는 측면을 도외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계열화’ 즉, 차별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한국사 교과서 내용구성을 조정한 결과, 정작 한국사의 본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오히려 역사의 모습을

5) 2009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은 2011년에 각론 수정을 거쳐 교과서가 집필되고 2013년 검정 및 채택과정을 거쳐 2014년 고등학교 1학년부부터 사용하게 된다.

기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학생들은 지나치게 소략한 전근대사와 지나치게 자세한 근현대사 모두 공부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결과적으로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 중간중간 하나씩 끼어들어간 세계사 단원은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더욱 복잡한 과목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중학교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하면서 분야별 비중도 중학교는 정치사와 문화사, 고등학교는 사회경제사와 대외관계사 중심으로 하자는 논의는 원칙은 일견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교과서에 구현하려고 하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역사가 본질적으로 시간성과 총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역사는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많은 사실들로 이루어지며, 시간의 순서나 길이와 무관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약 2000년에 달하는 역사를 지나치게 짧게 압축적으로 서술하려 한다면 누구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책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150년의 역사를 200쪽에 걸쳐 쓴다면 1년에 1페이지 이상을 쓰게 되어 대단히 전문적 내용까지 모두 담긴 역사책이 탄생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선사시대부터 1860년까지의 역사를 약 150쪽 정도로 다루고,⁶⁾ 이후의 약 150년 간 시기를 약 200쪽에 걸쳐 다루고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 간의 내용차별화를 위한 교과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에게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결국 계열성 확보와 같은 외부적인 요구에 따라 시간성과 총체성을 왜곡 또는 편집하는 것은 역사의 본모습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모든 역사적 사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서로 역동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한다. 어떤 사실은 정치적 범주 안에서만 일어나고, 어떤 사건은 문화적 현상으로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사회는 양반 이후라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양법의 확대라는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변화가 서민의 지위 향상이라는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결국 민화나 사설시조, 한글소설 등 서민문화의 유행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를 어느 하나를 중점으로, 혹은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사나 문화사, 경제사 속에서 무엇을 서술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대동법’의 시행을 정치사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 대동법은 조선후기 격렬한 정치적 쟁론 끝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을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여 정치사 중심의 중학교 역사 서술에서는 배제하라고 한다면 그 또한 정상적인 역사서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문화사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해서 불상과 절, 탑 등 각종 문화재를 국가별로 늘어놓는 방식도 바람직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정치사 중심, 혹은 문화사 중심으로 쓰라고 하였을 때 이러한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이 제시되었던

6) 그 결과, 잠깐 졸고 일어났더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거나, 한 학기 만에 선사시대부터 흥선대원군 시기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집중 이수제가 강요되었을 때에는 집중 이수가 아니라 집중 포기라는 말이 나왔고, 세계사의 경우는 더욱 심하여 세계사는 3개만 맞아서 ‘세 개사’가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하였다(문경호, 『역사교육 계열화에 대한 재검토와 근·현대사 비중의 적절성 모색』에 관한 토론문, 『역사교사 세미나 자료집』, 교육부, 2014.2.17, p.83).

적도 없었고, 특별히 이상적인 문화사 또는 생활사 서술의 사례가 개발된 바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연구 동향을 예로 들며 문화사나 생활사를 강조하는 연구는 있었으나 교과서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고 보인다. 본질적으로 역사 서술에 중점 분야를 설정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그다지 합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역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 그 서술 방법이나 내용 구성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인 기준은 우리 역사의 본모습이다. 우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 역사의 본모습은 도외시하고 중학교와 차별화를 해야 한다거나 학생의 흥미가 어디에 있다거나(사실 학생의 흥미는 학생마다 다르고 이를 일부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이용하여 어느 분야라고 확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쓰고 있다거나 하는 것을 근거로 역사를 이리저리 재단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 유럽이 근현대사를 확대하여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당한 논거가 될 수 없다. 그들이 근현대사를 중시한다면 그것은 그들 국가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쓰는 것이 타당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무사정권을 타도하면서 현재의 국가로 발전하였고, 중국은 신해혁명으로 청조를 타도하면서 현재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유럽 역시 시민 혁명을 통해 봉건 사회를 타도하고 19세기 국민국가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전근대 타도와 함께 등장한 근현대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들에게 전근대는 타도의 대상이고 근현대는 현재의 국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어떠한가?

우리는 개항 이후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결국 식민지시기로 접어들었다. 식민지시기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훼손된 시기이다. 우리에게 전근대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계승하고 기억해야만 할 대상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전근대를 타도한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타도당했고,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국가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우리의 역사 전개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 전근대를 축소하고 근현대를 확대하여 서술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 시대 일제의 통치 정책과 그 당시 일어난 문화적 변화(7)를 세세하게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역사의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역사의 주체였던 전근대시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 만큼 잘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 일제의 탄압상을 자세하게 알고, 그 시기 우리 민족의 비참했던 처지와 처절했던 독립운동에 대해 세세하게 배우면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식민통치 시기가 끝나면 해방 이후 분단 과정을 공부

7) 예를 들면 한복에서 고무신을 신던 것에서 양복이 보편화되었고, 단발머리나 파마머리를 하고 블라우스와 스커트차림에 하이힐을 신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일제에 의해 여성에게 ‘몸빼’ 바지가 강요되기도 하였다는 내용들이다. 그밖에 상류층 중심으로 커피, 과자, 빵, 케이트, 아이스크림 등이 소개되었고, 2층 양옥과 문화주택이 등장했고, 아파트까지 건축되는 등 도시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한철호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4, pp.281~281).

하게 된다. 분단의 과정을 배우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이념대립과 미국과 소련이 분단에 작용했던 역할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역사라고 해서 배우지 말자거나, 덜 배우자는 것이 아니다. 이 시기의 역사는 현대 사회의 출현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전근대 시기 우리 역사에 비해 10배 이상, 정확하계는 약 17배 정도까지 확대해서 배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근현대사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국내 연구자는 물론 외국 전공자들이 근현대를 주로 전공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까닭도 있다. 외국 연구자의 경우 전근대시기 한문 사료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식민지시기 역사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되어 이러한 외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규정된 자기정체성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식민통치에 의해 왜곡된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바른 자기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였던 결과, 타자의 기준과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일이 바람직한 역사 서술의 방법으로 평가받기에 이른 것이다.⁸⁾

근현대사의 비중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까닭은 이뿐만이 아니다. 남북한의 역사적 이견은 근현대사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1900년 이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점에는 공통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전근대 시기 이념 대립은 극단적이지 않았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부분에 한국사 교과서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다. 그러나 같다는 출발에서 다른 것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다른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일제하에서 민족사학이 확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좌익과 우익이 이념은 달랐어도 독립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이념 대립은 오히려 역사학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근현대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1920년대 이후 극심해진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립과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 그리고 부단했던 양파의 통합노력의 실패와 이것이 외세의 개입에 의해 분단으로까지 연결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아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전근대 시기는 10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 몇 가지 정도를 선택하여 배우면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한 달 또는 수일 간격으로 일어난 일까지 모두 알고 시험까지 쳐야 하는 당위는 어디에 있는가?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수단인 하나일 뿐이고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자세한 근현대 시기 역사 서술은 학생들에게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상을

8) 이러한 시각에 의한 역사서술이 보편화되면서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서 ‘서구중심주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양사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슬람,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역사를 고루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그 결과 새롭게 개정된 2007·2009 교육과정에 의한 세계사 교과서는 이전에도 이미 그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었는데, 3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일어난 전 세계의 역사를 모두 망라하여 학생들이 학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심어주기보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도뿐만 아니라 일어난 달과 날짜까지 구분해서 외워야 하는 학습 부담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은 우리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기보다는 역사과목을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외워야만 하는 과목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볼 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의 단원 배분에 관하여서는 7:3내지 5:2정도가 적정하리라고 생각된다. 만약 5:2로 구성한다면 선사와 고대, 중세,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 현대를 각 한 단원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한다. 이때 근대는 흥선대원군~식민통치 시기까지, 현대는 해방이후로부터 현대사회까지로 구성하되, 현대사의 하한과 현대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는 최근에 있었던 선거의 결과는 물론, 각종 국제회의, 한류 열풍을 보여주는 최근 드라마와 영화, 스포츠 스타의 사진과 관련 내용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는 최신의 사건을 모두 알려야 하는 신문이나 잡지와는 그 역할과 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어야 하고, 학생들은 이를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써 배우고 시험을 치른다. 따라서 다양한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취급하고 교과서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의 유동적인 가치를 다루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 볼 수 있는 과목에서 다루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뜩이나 과중한 분량 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3. 계열화 및 세계사 교육 문제

학교급 간에 다루는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틀린 것은 아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다르게 서술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왔던 방법들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것을 어떻게 시대 혹은 분야를 나누어 서로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까에 집중하였을 뿐이고, 이를 하나의 원칙으로서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 집필과정과 현장수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사에서 가르쳐야 할 필수적인 내용요소를 정하고, 학교급별로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지금까지 쟁점화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는 교육과정을 최대한 대강화하여 집필자의 재량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수험서로서의 교과서를 출간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집필자들의 ‘절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학습 요소 및 서술 수준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학교급별로 필요한 내용요소의 서술 수준을 달리한다면, 이에 따라 현장 수업의 내용과 평가 기준 역시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논의 주제 외에 언급하고 싶은 문제로 세계사 교육 문제가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는 ‘한국사’와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이 있는데, ‘한국사’는 교육과정과 수능에서 필수로 지정되어 그 지위가 매우 공고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과목은 교육과정상 선택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물론, 수능에서 사회과 10개 과목 중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당초 ‘동아시아사’ 과목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을 위주로 다루므로 학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세계사’와 다루는 범위가 중복되면서 ‘동아시아사’는 ‘세계사’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더욱 심화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오히려 역사과목 중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고등학교에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수능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수의 학생이 이 과목을 선택하여 앞으로 수년 내에 이 과목들은 교육과정과 수능에서 사실상 枯死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사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사만 배우는 것이 이상적인 역사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폐쇄적인 자기인식을 낳을 수도 있고, 세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후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세계사 교육의 필요성에는 대개 공감할 수 있지만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그 출발에서부터 난항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사 위축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제나 사회과 내부에서 ‘밥그릇싸움’으로 치부되며 사회과 내부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사 수능 필수화로 ‘한국사’의 지위가 크게 강화된 지금, 세계사 교육까지 강화하자고 하면 다른 사회과목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사회과 내부에서 거론될 문제는 아니다.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교과군이 사회이다. 사회 속에는 사회, 지리, 역사, 윤리 전공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과목의 수도 10여 개다. 하나의 전공자가 해당 교과군 내의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과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그리고, 총 4과목으로 나누어지면서 과목 간에 상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과학교과와 비교해 보아도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결국, 사회과는 4개 전공, 10개 과목을 작위적으로 하나의 교과군 속에 묶어 놓음으로써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불씨를 처음부터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학교별 교사 수급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매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시수 확보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학교현장에서는 해묵은 문제이지만 정부에서는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하며 외면하면서 오늘 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정부가 표방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흥미를 살려주는 교육, 공교육 정상화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과정과 수능 모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에 편중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교육 축소, 학습부담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현상으로 보았을 때, 다른 과목을 모두 약화시키고 국영수 위주

의 교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효과적인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결론적으로 사회과목 간의 ‘밥그릇싸움’은 처음부터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마치 두 평 남짓한 공간 안에 10사람을 집어넣고 서로 양보하며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사회 4과목을 교육과정상 독립교과로 편성하여 각 교과별로 적정한 과목수와 수업시수를 정하여 더 이상 정해진 총 시수 안에서 서로 간에 지분다툼을 하는 일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과목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교과목의 내용을 기형적으로 축소·분할하여 새로운 과목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로 교과목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III. 결어

지금까지 역사 교육과정은 언제나 어떤 비판이나 지적에 대응하여 이를 모면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계열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연히 다르게 편성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양 외의 다른 국가들의 역사 서술 분량을 늘리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사 그 자체의 본질과 역사의 본모습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고식적인 해결방법은 학교 현장에 또 다른 난점을 초래했고, 학생들의 역사 학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국 학교 현장에서 역사과목이 외면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어떤 분야에서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제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 가지를 자르는 것으로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번 한국사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 교육과정을 총론 차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이현복(2014). 역사교육 계열화에 대한 재검토와 근·현대사 비중의 적절성 모색. *역사교사 세미나 자료집*, 교육부.
- 양호환(2011). 중등 역사 교육과정 개발의 현안과 역사교육 개선 방안. *역사교육*, 120, 294-295.
- 문경호(2014). 역사교육 계열화에 대한 재검토와 근·현대사 비중의 적절성 모색에 관한 토론문. *역사교사 세미나 자료집*, 교육부.
- 한철호(2014).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국문 요약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자국사를 학교 교육과정 속에 편성하고, 이를 가르치고 있다. 과목의 편제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자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국사가 국어와 함께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고, 통합의 중추가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사과목은 일시적으로 교육과정상 선택과목에 편제되었던 적도 있었고, 최근까지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 사실상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사교육에 대한 홀대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는 언제나 국사를 소홀히 다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결국 한국사 수능 필수화 조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사 교육의 필요성이 이처럼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사 교육은 언제나 ‘위기’, ‘난항’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었다. 이는 물론 수능에서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국사를 학생들이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현실이 근본적인 배경이었지만, 국사 교과서의 방대한 분량과 그 내용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구성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역사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전근대사, 근현대사, 선택과목, 사회과